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 인 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4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2일

발 의 의 원 :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이만규, 임태상,
전경원의원 (9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의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의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약칭을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변경하여, 법에서 사용한 약칭과 일치시키고, 중앙

정부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과의 위계를 명확히 함. (안 제5조)

다. 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임기, 심의·자문사항, 회의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이나 수당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함. (안 제20조)

마.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마련을 요청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자료제작, 교육, 홍보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의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토목, 구조, 산업을 비롯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심의. 이 경우 국·시비보조 및 재배정 등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치구·군의 사업도 포함한다.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사항
6.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7.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3조(심의시기)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까지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준 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협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각 시설물마다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시장은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과 구·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부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8조 및 제17조 관련)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교차로, 지하도, 터널, 생태통로 등 라. 걷고싶은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철도시설	가. 철도 시설물(교각 등) 나. 철도관련 내외부 설치물(노선안내도 포함) 다.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휴양공간	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나. 등산로, 산책로 등(단순 노면정비 제외)	
공공청사 · 문화복지 · 교통환경시설	가. 공공기관의 청사, 주민센터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체육관,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마.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시각이미지	가. 정보디자인 개발 및 활용(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나.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활용(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서체 등)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포함)	가. 자전거 도로 나. 보도포장(맨홀, 트렌치, 수목보호대 등 포함)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라. 방음벽, 낙석방지망 마. 아케이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중앙차선분리대 사.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블라드 아. 가로등	
기 타	가. 대중교통정류소,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나.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관광안내소, 정보제공 부스 등 라. 분수대, 벤치, 정자, 음수대 마.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휴지통 등 바. 공원등, 보행유도등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개·전면공지, 광장 등	
안내사인	가.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전광판) 나. 디지털 영상매체 다.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라. 지정벽보판 마. 현수막 게시대 바.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	가.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상수도제어함 나.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기지국, 통신안테나 라. 공중전화, 우체통	
야간경관 등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이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